

제 145호 (2007. 9. 16)

- 경제 : **2007년 7월** 건설 수주 동향
올 1~7월 주택 건설, 작년 같은 기간보다 **26%** 감소
 - 이슈 : 공공 건설 현장의 애로 사항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따른 건설 분야 협력 확대 방안
 - 정책 : 한국 건설산업의 진단 및 경쟁력 제고 방안(I)
 - 경영 : 양골라 건설시장 동향과 전망
 - 정보 :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구성
 - 논단 : 도로 통행료의 사용자와 국민 세금 부담
-

2007년 7월 건설 수주 동향

- 주택 수주 침체 매우 심각 -

- 2007년 7월 건설 수주는 토목 수주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주택 수주가 매우 부진해 전년 동월 대비 9.5% 감소한 7조 6,842억원을 기록함.
- 공공부문은 전년 동월 대비 33.9% 증가한 2조 2,000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토목 수주가 호조를 보임과 동시에 작년 기저효과가 반영된 결과임.
 - 공공 토목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50.5%나 증가했는데, 이는 상반기 재정 발주가 호조를 이룬 것과 예년에 비해 작년 7월 공공 토목 수주가 부진했던 기저효과가 더해진 결과임.
 - 공공 건축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10.4% 증가했지만, 이는 작년 기저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2005년 동월 대비로는 오히려 17.6% 감소함.
 - 세부적으로 보면 비주거용 건축이 전년 대비 35.4%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작년 기저효과에 의한 것이며, 수주금액 자체는 예년에 비해 다소 양호한 수준임.
 - 반면, 주거용 건축은 전년 대비 15.4%, 2005년 대비 29.1%나 감소해 상당히 부진함.
- 한편, 민간부문은 토목 수주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민간 수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축 수주가 주택 수주 급감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해 전체적으로는 전년 동월 대비 19.9% 감소한 5조 4,842억원을 기록함.
 - 민간 토목은 민자 사업의 호조와 작년 기저효과에 힘입어 전년 대비 184.5% 급증했음. 그러나 작년 기저효과가 많이 반영된 결과이며, 2005년 동월 대비로는 오히려 3.2% 감소함.

최근 건설 수주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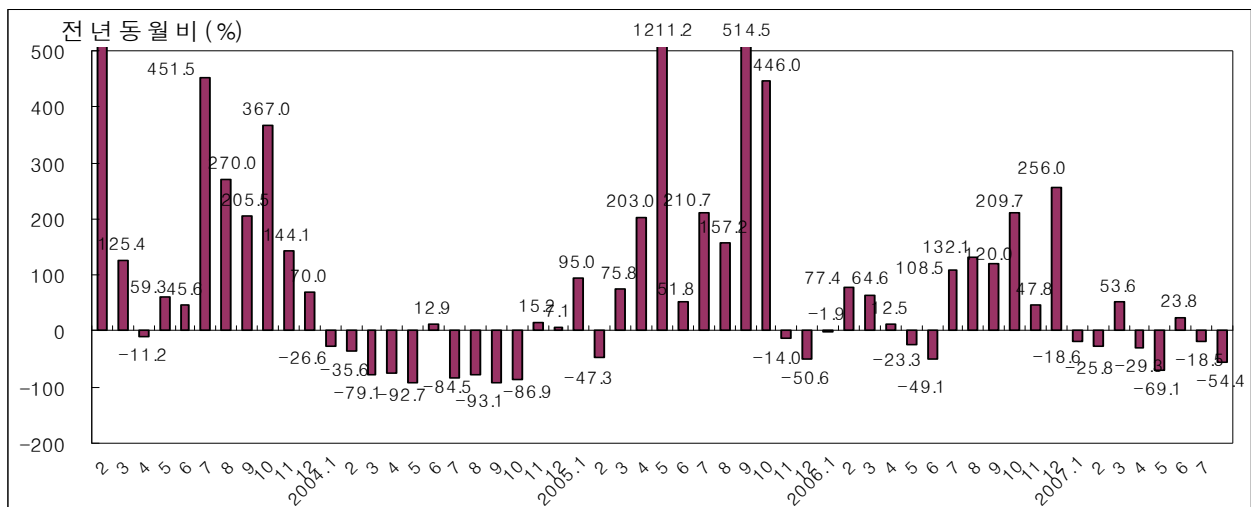
(단위 : 십억원, 전년 동기비 %)

구 분	합계	발주처별						공종별			
		공공			민간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토목	건축		토목	건축				
2007년 7월	7,684.2	2,200.0	1,450.1	749.8	5,484.2	1,209.6	4,274.6	2,659.7	5,024.5	2,208.3	2,816.1
증감률	-9.5	33.9	50.5	10.4	-19.9	184.5	-33.4	91.6	-29.2	-56.4	38.3
2007년 1~7월	63,581.3	16,489.7	11,285.6	5,204.1	47,091.7	7,527.5	39,564.1	18,813.1	44,768.2	27,814.4	16,953.9
증감률	18.7	22.1	29.7	8.4	17.5	91.5	9.5	48.9	9.3	4.6	18.2

자료 : 대한건설협회.

- 민간 건축에서는 비주거용 건축이 예년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 작년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쳐 전년 대비 38.9%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임.
- 반면, 주거용 건축의 경우는 2002년 7월 1조 2,253억원을 기록한 이래 가장 낮은 수주 금액을 기록해 침체가 매우 심각함(전년 동월 대비 59.3% 감소).
- 7월 수주가 전년 대비 감소함으로써 지난 1~7월 동안 건설수주는 올 상반기 24.0%보다 증가율이 둔화된 전년 동기비 18.7% 증가를 기록했다. 작년 건설 수주가 상저하고 현상을 기록했음과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향후 주택 수주 여건이 계속 좋지 않음을 감안할 때 향후 건설 수주 증가율은 계속해 둔화될 것으로 보임.
- 7월 재건축·재개발 수주는 재건축 수주가 전년 동월 대비 48.9% 감소하고, 재개발 수주도 58.5%나 감소해 전체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 54.4%가 감소함.
- 재개발은 전년 동월 대비 58.5% 감소한 4,640억원을 기록했는데, 이 금액은 재개발 수주가 호조를 이루기 전인 작년 상반기의 재개발 평균 수주 금액보다도 적은 금액이며, 재개발 수주가 작년 6월부터 호조를 이뤘기 때문에 올 7월 재개발 수주가 전년 동월비 급감함.
- 재건축은 수주 금액이 약 4,400억원으로 이는 올 들어 월 단위 수주 금액으로는 가장 높은 금액이지만, 건수 면에서는 그렇지 못해 일부 대형 재건축 사업의 수주에 따른 일시적 증가 현상으로 파악됨. 그러나 작년 6, 7월 재건축 수주가 호조를 이룬 영향으로 전년 대비 48.9% 감소함.

재건축·재개발 수주 금액 증감률 추이



이홍일(연구위원·hilee@cerik.re.kr)

올 1~7월 주택 건설, 작년 같은 기간보다 26% 감소

- 아파트 비중 감소, 다세대 등 주택 건설 비중 증가 -

- 2007년 7월 주택 건설 실적은 4만 5,848호로 전월 대비 51.7%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월대비 19.9% 감소
 - 분양가상한제 시행의 경과 조치 기간(8.31)의 도래로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 승인 실적이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년 수준을 밑돌고 있음.
 - 특히 지방 도시의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임박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 건설 사업 승인 실적이 감소하고 있음.
-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의 공급이 감소하면서 전제 공급 물량 중 아파트 비중이 전년 도보다 낮아짐(2006년 1~7월, 86% → 2007년 1~7월 74%).
 - 2007년 1~7월(누계) 아파트 건설 실적은 17만 6,284호로 전년 동기 대비 36.2% 감소한 반면, 아파트 외의 주택은 4만 5,265호로 전년 동기 대비 36.4% 증가
- 2007년 7월 지역별 주택 건설 실적은 인천 외 8개 지역은 전월 대비 주택 건설 실적이 감소, 서울 등 6개 지역은 전월 대비 증가세를 나타냄.
 -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주택 건설 사업 승인 실적이 집중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구분되고 있음.

2007년 1~7월 주택 건설 실적

(단위 : 호, %)

구 분	2007년 7월		2007년 1~7월(누계)	2006년1~7월(누계)	전년 동기 대비
	실적	전월 대비 증감률			
전 국	45,848	-19.9	176,284	238,611	-26.1
수도권	19,509	18.9	72,386	74,581	-2.9
서울	7,338	16.2	17,272	24,202	-28.6
지방	26,339	-35.5	103,898	164,030	-36.7

자료 : 건설교통부.

김현아(연구위원·hakim@cerik.re.kr)

공공 건설 현장의 애로 사항

- 공공 건설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함에 있어 전시효과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치밀한 계획없이 사업에 착수하는 경우들이 있어, 1999년 3월에 건교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대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 바 있음.
- 그러나 최근에 보고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예산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약 47.4%의 SOC 현장에 예산 배정이 되지 않아 심각한 공사차질을 빚어낼 뿐만 아니라, 60% 이상의 현장이 공기가 연장됨으로써, 기업 경영을 부실화시키고, 품질 저하와 안전문제 야기, 공사비 상승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공공 건설현장의 애로 사항 조사

- 올 6월에서 8월 사이에 전국 공공 건설현장의 관련 임원 및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중에 겪는 애로 사항들에 대하여 면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계 변경의 불합리함이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지적되었으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 문제, 발주자의 책임 회피 및 불평등 관계, 저급의 설계 품질 등이 그 뒤를 이었고, 감독·감리 역량 부족, 낮은 계약 공사비로 인한 부실, 장기계속계약의 불합리, 감독·감리 업무 지연 등이 지적되었음.
- 면접과 설문결과에 따르면 근본적으로 부실한 설계와 예산 부족에 따른 예산 배정의 불합리함이 공공 건설현장의 많은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결과 설계변경에 대한 필요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애로 사항의 근본 원인

-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대책”에서 설계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의 「건설기술백서」(2004)에 의하면 국내 공공공사의 부실 원인으로 설계 부실을 꼽는 것이 조사 대상 671건 중 258건(38.5%)으로 나타나고 있고, 금번 설문 결과에서도 “저급의 설계 품질” 문제가 많은 문제로 지적됨.
- 최근 들어 기획예산처가 매년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발표하여, 이전 단계의 총사업비 대비 물가 및 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한 사업은 타당성 재검증을 시행하고, 공사 계약시 낙찰 차액 환수와 착공 이후의 설계 변경은 불가피

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설계 변경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 또한 재정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한 기획예산처는 재정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있어, 발주자는 시공 계약자의 설계변경 요청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처리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 업체의 입장에서는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적용으로 낙찰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설계 변경의 어려움으로 이중의 압박을 받음으로써, 발주자의 책임회피나 불평등 관계에 대한 불만과 감독·감리에 대한 문제제기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한편 최근 SOC 예산 비중 축소와 장기계속계약으로 단위 사업에 연간 배정되는 예산이 태부족한 실정이라서 매년 계획한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게 되어 공기연장으로 이어지고, 총사업비가 동일하게 지급되더라도 공사 기간의 연장에 따른 효율성은 크게 저하되고 있음. 이 같은 문제는 현장유지비(간접비)를 증가시키고, 사전 공사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도 늘어나고 있으나, 이 같은 금융 간접비도 4.29%의 현장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고 전액 보상받은 현장은 4.8%에 그치고 있음.
- 전국 공공 SOC 건설 현장은 47.4%가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예산이 부족한 현장 중 45.4%는 사전(외상) 공사를, 48.5%는 현장관리 인원을 축소하는 등 파행적으로 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개년 간 실제 예산 배정액은 당초 예상액 대비 약 70% 정도에 불과하였고, 이로 인해 목표 공정률 대비 68.2%밖에 진행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장기계약 공사의 첫째 예산 배정액은 계약 금액의 평균 3.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정부 정책의 근본적 재고 필요

- 금번 설문조사의 결과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대책”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노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사업 절차 확립 및 준수, 설계 내실화, 신규 사업 제어장치, 완공 위주 집중 투자, 선보상-후시공 제도 등은 현실적으로 공공 건설사업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개선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김우영(연구위원·beladomo@cerik.re.kr)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따른 건설 분야 협력 확대 방안

■ 배경

- 2000년 6월 15일의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한 화해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음.
 - 1999년 총 5,661명이었던 남북 인적 왕래는 정상회담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에는 10만 명을 넘어섰고, 교역 규모는 1999년 3억 3,000만 달러에서 2006년에는 13억 5,000만 달러로 증가
- 1차 정상회담이 물꼬를 트는 회담이었다면, 2차 정상회담은 제도를 정착시키는 단계
 - 제도와 기술은 경제 성장의 동인이므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들을 북한에 이식시켜준다면 경제 성장에 기여할 뿐 아니라 북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확보 가능

■ 남북경제협력의 유망 건설 분야

건설분야 남북 경제협력 유망분야

분야	내용
개성공단 사업 확대	2단계 사업, 495만㎡ 규모 공단과 배후도시 건설에 가속도
남북 철로 연결	북한 철로 인프라스트럭처 개선, 온정리-원산 또는 개성-평산 복원, 대륙 철도 연결
발전설비 및 송전선 개보수	대규모 재원 소요, 전략 물자 여부 판단 및 북핵문제 고려해 중장기 과제로 추진
금강산 관광사업 활성화	승용차 관광, 다양한 관광코스 개발, 금강산 일대 6억평 개발 (2025년까지 총 30억 달러)
개성-평양간 고속도로 개보수	제10차 경추위에서 북이 요구(약 3,077억원)

- 현재, 북한의 전력 부족은 매우 심각
 - 실제 북한은 770만kW 수준의 화·수력 발전설비 용량을 갖고 있지만 가동률은 30%를 넘지 못하고 있음.
- 또 다른 남북 경험의 핵심 의제 중 하나는 자원 개발
 - 상대적으로 북측에 풍부한 각종 광물 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해 남측의 산업에 이용

한다면, 남북 모두 이득을 얻을 수 있음.

- 북한에는 철광 등을 비롯해 유용한 광물이 40여 종이 존재하며, 연간 20조원이 넘는 남한의 광물 수입량 중 상당분을 대체 가능
- 최근에 가장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
- 현재, 여야 의원들은 강원도 속초, 양양, 인제 등 설악산 권역을 북한의 금강산 관광 지구처럼 통일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
- 금강산뿐 아니라, 백두산, 묘향산, 칠보산 등 산악 경관 탐승 상품의 개발도 가능
- 주을, 운산, 용강 등 온천지역과 태성호, 연풍호 등 호반 지역, 시중호, 삼일포를 비롯해 몽금포, 구미포, 마전휴양지, 송도원 등을 온천 및 휴양지로 개발 가능

■ 건설 부문의 남북 협력 확대 방안

- 남북 경제 공동체의 건설은 궁극적으로 남북한 산업 협력, 특히 건설 분야 협력의 획기적 발전이 있어야 가능
- 2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건설분야 협력이 크게 진전될 수 있도록 산업협력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북측에 제안하고 세부 실천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함.
- 우선 남북한은 개성공단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 필요
- 통행, 통신 등에 장애가 존재하고, 노동력 수급과 효과적인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 상존
- 북측에 북측 기업의 동반 참여, 북한 주민의 개인 서비스업 허용, 노동력 이동 촉진 등 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특구 정책을 채택하도록 요청할 필요
- 이들 지역에 소규모 남한 기업 전용공단을 조성하게 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는 개성공단에 버금가는 투자 여건을 조성
- 개성공단 이외 지역에서의 투자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법규의 제정이나 준용할 수 있는 법규를 확보

박성민(연구위원·smpark@cerik.re.kr)

한국 건설산업의 진단 및 경쟁력 제고 방안(I)

■ 건설산업의 현주소 진단

- 건설업은 경제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국내총생산(GDP)에서 건설투자 비중이 15~16% 수준에 달할 정도의 중요성을 지닌 거대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음.
 - 다만 실질 부가가치 증가율은 전자·조선·자동차 산업에 비해 낮은 편임.
 - 그러나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Global Standard와 괴리된 시장 구조는 건설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 WTO 가입, FTA 추진 등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는 수주 및 준공 실적이 급성장하고 국내 현장에서는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산업 구조의 모순은 여전함.
 - 발주방식의 변별력 부족도 기업간 경쟁과 기술 개발 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국내 건설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건설시장은 정부의 규제 지속 및 공영 개발 위주의 정책 추진 등으로 자율성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임.
 - 건설업의 정부 의존도를 높이고, 지방 시장의 급격한 위축은 경제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

■ 건설시장의 최근 변화 동향

- 골목산업의 한계를 점차 벗어나 최근에는 금융, IT 산업과의 융·복합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기존의 단순한 시설 공사 위주에서 자본과 기술에 의해 지배되는 시장으로 전환
 - 토목, 주택 건설에 첨단 기능의 결합 및 적용
 - 선진 금융 기법을 통해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법의 모색이 활발하게 진행중
-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건설시장의 글로벌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보다 적극적인 추진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음.
 - 일정 부분 포화상태에 도달한 국내 시장은 향후 글로벌 경쟁력이 생존의 필수조건

- 건설시장의 투명성 제고 노력도 형식적 측면에서 실질적 측면 강조로 전환하고, 민간기업의 창의적 대응력을 배가하여 부가가치 창출 확대에 주력

■ 경쟁력 제고를 위한 향후 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

- 건설시장의 환경 변화에 탄력적이고 유연한 대처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수요와 공급 체계의 검토가 필요하며, 공정한 경쟁 질서의 구축을 통해 시장 참가자의 진입 및 퇴출이 원활하고 엄격하게 작동되도록 하여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회복 시켜야 함.
- 인위적인 규제 중심의 정책보다는 수요·공급의 법칙에 기본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시장의 자율적 조절 기능을 강화토록 해야 함.
 - 시장 참여자의 다양한 참여와 유인 촉진을 통해 시장의 수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함.
 -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시장경쟁 체제를 통한 합리적인 가격 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시장 거래 질서의 구축으로 전환
- 시장 참여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정책의 지속성을 보장하여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켜야 함.
- 건설시장의 환경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생산체계의 조속한 정착이 되도록 후속 조치와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하고, 그동안 공급 증대·노동 집약 위주의 양적 성장 추구에서 품질 향상 및 합리적 관리·자본 및 기술 집약엔지니어링 능력 향상 등 질적 수준의 향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대전환이 필요함.
- 다양한 여론수렴과 조정, 현장 실태의 올바른 파악을 통해 민간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확대하고, 정책 당국도 꾸준한 자기 혁신을 통해 건설시장에서의 자발적인 개혁과 자율적인 거래 질서의 구축을 유도하는 등 정책 추진 주체의 책임과 변화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구체적인 경쟁력 제고 방안

1. 건설 관련 법·제도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건설 관련 법 체계는 수적으로도 지나치게 많아 복잡하고 이해하기 곤란한 측면이 적지 않음.

- 2006년 11월 현재 건교부 소관 법령은 278개에 달하며, 그 밖에 관련성을 가진 훈령·예규·고시·기준 등도 1,200여 개가 넘는 실정
- 법령의 주요 내용도 규제 중심으로 되어 있어 건설시장의 기능을 왜곡하고 효율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큼.
- 업역 제한 등으로 시장 진입이 자유롭지 못하며, 분양가상한제 등 가격 규제나 경영 개발 주도로 인해 시장의 자율성을 상당히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
- 건설 법제의 목적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간 부조화도 초래되고 있음.
-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등록 요건 완화 규정은 페이퍼 컴퍼니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함.
- 주택 관련 법제는 분양가상한제 등을 통해 주택가격 안정을 추구하지만 국토 균형 발전 관련 법제는 지가 상승을 초래하여 주택가격의 상승 요인을 제공하는 이율배반적 결과
- 처벌 규정이 과다하고 이중 처벌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영업 정지 등의 규정은 그 실효성이 크지 않아 형식과 실질의 괴리현상이 여전함.
- 혁신 방안
 -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건설 법제를 만들 수 있도록 기존 법제의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
 - 건설시장에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하고, 새로운 혁신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의 개편 등 시장 기능과 정부 역할의 구분 및 재정립 필요
 - 새로운 건설 법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하고, 발주자의 역량 강화도 동시추진
 - 초고층 건물, 대형 공공시설 등 최근의 기술 발전을 반영한 법제 선진화 추구

두성규(연구위원·skdoo@cerik.re.kr)

앙골라 건설시장 동향과 전망

- 앙골라는 서남 아프리카 대서양 연안에 위치하며 면적 124만 7,000km²(한반도의 5.6 배), 인구 1,430만명(2005년)임.
- 나이지리아, 리비아에 이어 아프리카 제3위의 석유 생산국이며, 석유 이외에도 다이아몬드, 철광석, 금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한 자원 부국임.
- 국영 석유회사인 SONANGOL을 중심으로 원유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미국, 스페인 등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현재 원유 수출은 전 외화 획득원의 90%를 차지
- 1975년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후 식민지 시절 무장 독립 단체였던 MPLA(현 정부군), UNITA(앙골라독립민족동맹)이 정국 주도권을 놓고 27년 간 내전을 벌였으며, 2002년 2월 반군 지도자 사빔비의 사망을 계기로 내전이 종식되면서 현재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고 있음.

■ 경제 현황

- 오랜 내전으로 국토가 파괴되고, MPLA의 국가 계획 경제 실패, 과도한 외채, 극심한 인플레이션 등으로 경제는 극도로 악화되었으나, 석유, 다이아몬드, 철광석 등 대규모 자원 매장으로 경제 발전의 잠재력이 높음.
- 신규 유전 발굴에 따라 앙골라 내 원유 생산량은 130만 배럴에서 2007년에는 180만 배럴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인프라 복구 사업 및 외국인 투자 유입 등으로 앙골라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 1995년부터 2004년까지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9%를 기록하였고, 2004년 12.2%, 2005년 19%라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시현하였음.
 - 2005년 GDP는 243억 달러이며 1인당 GDP는 1,640달러임.

주요 국내 경제 지표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e)	2006년(f)
경제성장률	15.3	4.7	12.2	19.1	11.4
재정수지/GDP	-6.0	-6.0	-4.0	-4.5	-5.0
소비자 물가상승률	108.0	94.9	37.3	23.4	23.9

자료 :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 건설시장 동향 및 전망

- 대규모 시설 발주가 예상되고 있으나, 실제 발주되거나 시행되는 프로젝트는 아직 많지 않으며, 대인지뢰 등으로 인해 외국 건설업체가 선볼리 앙골라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인프라 발주 물량은 약 5,000만 달러 규모에 불과하며, 이 또한 기진출한 포르투갈, 브라질 업체들이 독식하고 있고, 일부 남아프리카공화국 업체들이 주택 사업 및 오피스 빌딩 공사를 수행하고 있음.
- 국제 금융기관의 지원으로 시급히 추진 중인 인프라 개·보수 사업은 식민 지배국이었던 포르투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자체 재원을 통한 전후 복구사업 추진은 아직 불확실한 상황임.
- 현재까지는 포르투갈, 브라질계 등 2~3개 회사가 주요 관급공사를 맡아 시공 중이며, 최근 중국계 건설회사가 진출하여 활동 중이나 아직 소규모 민간 공사에 국한되고 있음.
- 앙골라는 27년 간에 걸친 내전으로 전 국토가 파괴되고, 국가 계획 경제의 실패와 경험 부족으로 경제 또한 극도로 파탄난 상태임.
- 내전 중 교량, 도로, 철도, 공항, 발전소 등 국가기반시설이 대부분 파괴되었으나, 종전협정 체결 후 전후 복구 사업을 추진 중임.
- 그러나, 아프리카 제3의 산유국이며, 1일 13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고, 다이아몬드 생산량이 세계 4위이며, 철광석 등 지하자원도 풍부함.
- 이러한 석유, 다이아몬드 등 풍부한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현재 국가 재건 사업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향후 건설시장의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고, 내전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사회 불안 요소도 잔존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건설 진출 현황

- 현재 우리나라 업체가 앙골라에서 수주한 수주 누계는 47건 6억 8,982만 달러 규모임.
- 설계 분야에서는 2002년부터 「공간종합건축」이 국영 석유회사 SONANGOL 본사 건물, 컨벤션센터, 오피스빌딩, 주상복합빌딩 등의 설계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시공 분야에서는 남광토건이 컨벤션센터, 오피스빌딩, 주상복합 빌딩 등을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 중에 있음.
- 한편, 건설 분야가 아닌 설비 분야에서는 현대중공업이 Exxon Mobil로부터 FPSO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시설) 설비를 8억 달러, 턴키 방식으로 수주하였음.

■ 투자 촉진 인센티브 정책

- 외국 자본으로 앙골라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국립민간투자청(ANIP)」(www.investinangola.com)에 투자자의 신분, 법적 성격 및 계획된 투자에 대한 서류와 함께 투자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 투자 계획 승인은 미화 5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까지는 「국립민간투자청(ANIP)」에서 심의하여 승인하고 기간은 15일 이내이며,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의 규모는 내각에서 심의하여 승인하고 기간은 30일 이내임.
- 앙골라는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산업 분야(targeted industry areas)에 투자하는 민간투자에 대해서 세금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음.
- 특정한 산업 분야(targeted industry areas)는 농축업(farming and animal breeding), 가공산업(processing industries), 어업과 관련 부문(fishing and its derivatives), 건설업(civil construction), 보건 및 교육(health and education), 에너지와 물(energy and water infrastructure), 도로 및 철도(road and railroad), 항만 및 공항(ports and airports), 통신(telecommunication), 창고 및 운수장비(heavy cargo and passenger equipment)임.
-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지역을 A, B, C구역으로 구분하여 인센티브를 달리하고 있음(자세한 내용은 「국립민간투자청(ANIP)」 홈페이지 www.investinangola.com 참조).

앙골라의 투자구역별 기본 인센티브 기간

개발구역 (development zones)	관세 및 수수료 (duties & fees) 면제	산업세(industrial tax) 면제	자본이득세 (capital gain tax) 면제
A구역	3년	8년	5년
B구역	4년	12년	10년
C구역	6년	15년	15년

이의섭(연구위원·eslee@cerik.re.kr)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 구성

- 2006년 5월 31일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가구당 평균 총자산은 2억 8,112만원임 (통계청이 전국의 표본 가구 9,300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한 표본 조사).
- 이 중 저축, 보험, 전·월세 보증금 등 금융자산이 5,745만원으로 전체 자산의 20%, 부동산이 2억 1,604만원으로 76.8%, 기타 자산이 764만원으로 2.7%를 차지함.
- 또한, 가구당 평균 부채 총액은 3,948만원이고, 순자산은 2억 4,164만원임.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 구성

(단위 : 천원, %)

구 분	금액	구성비
총자산	281,123	100.0
금융 자산	5,7448	20.4
부동산	216,041	76.8
기타 자산	7,635	2.7
총부채	39,479	-
순자산(총자산-총부채)	241,644	-

주 : 금융 자산은 저축, 보험 및 전·월세 보증금 등이고, 부동산은 주택, 토지 및 건물 등이고, 기타 자산은 자동차, 회원권 등임.

■ 부동산 소유 여부별 자산 구성의 차이

-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는 총자산, 순자산, 금융 자산, 부채 총액 모두 부동산 을 보유한 가구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부동산 소유 가구가 미소유 가구보다 총자산 금액은 9.2배, 순자산 금액은 10.3배나 되어 자산 격차가 크게 벌어짐.
- 부동산 미소유 가구는 전·월세 보증금이 총자산의 50% 이상을 차지함.

우리나라 가구의 부동산소유 여부별 자산구성의 차이

(단위 : 천원, %)

구 분	부동산 소유 가구	부동산 미소유 가구
총자산	374,968(100.0)	40,617(100.0)
금융 자산	65,247(17.4)	37,458(92.2)
부동산	300,339(80.1)	-
기타 자산	9,381(2.5)	3,159(7.8)
총부채	51,300	9183
순자산(총자산-총부채)	323,668	31,434

주 : 괄호안의 숫자는 총자산에 대한 비중임.

■ 부동산 입주 형태별 자산 구성의 차이

- 총자산과 순자산 모두 자기 집에 사는 가구, 전세 가구, 월세 가구 순으로 나타남.
- 전·월세 보증금을 합한 금융 자산은 전세 가구가 가장 많이 보유하나, 전세 보증금을 제외한 순수한 금융 자산은 자기 집에 사는 가구가 가장 많이 보유함.
- 전세 가구의 금융 자산 8,358만원 중 전세 보증금은 4,948만원임.

우리나라 가구의 입주 형태별 자산 구성의 차이

(단위 : 천원, %)

구 분	자기 집	전세	월세
총자산	38,361.2(100)	17,425.1(100)	6,007.1(100)
금융 자산	5,830.6(15.2)	8,357.9(48.0)	2,495.8(41.5)
부동산	31,556.3(82.3)	8,504.9(48.8)	3,233.6(53.8)
기타 자산	974.3(2.5)	562.3(3.2)	277.7(4.6)
총부채	4,840.2	3,424.1	1,626.0
순자산(총자산-총부채)	33,520.9	14,001.0	4,381.1

주 : 괄호안의 숫자는 총자산에 대한 비중임.

■ 소득 5분위별 자산 분포

- 전체 가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은 연간 소득 5분위 계층(상위 20% 계층)이 1분위 계층(하위 20% 계층)보다 약 5.6배 많이 보유함.
- 순자산도 연간 소득 5분위 계층이 1분위 계층보다 4.5배 많이 보유함.
- 총부채는 연간 소득 5분위 계층이 1분위 계층보다 5.8배 많음.
- 참고로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은 2006년도 연간 소득 5분위 계층이 1분위 계층보다 7.6배 높음.

소득 5분위별 자산 분포

(단위 : 천원, %)

항 목	I 분위	II 분위	III 분위	IV 분위	V 분위
총자산	12,996.2(100)	17,936.6(100)	20,187.5(100)	29,264.2(100)	60,171.7(100)
금융 자산	2,487.1(19.1)	3,813.5(21.3)	4,679.3(23.2)	6,286.8(21.5)	11,455.9(19.0)
부동산	10,316.4(79.4)	13,772.7(76.8)	14,957.1(74.1)	22,117.5(75.6)	46,852.7(77.9)
기타 자산	192.7(1.5)	350.4(2.0)	551.1(2.7)	859.9(2.9)	1,863.1(3.1)
총부채	1,425.6	2,310.9	3,044.9	4,698.8	8,258.3
순자산(총자산-총부채)	11,570.6	15,625.7	17,142.5	24,565.5	51,913.4

주 : 괄호안의 숫자는 총자산에 대한 비중임.

이의섭(연구위원-eslee@cerik.re.kr)

도로 통행료의 사용자와 국민 세금 부담

이번 정기국회에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도로 건설에 투입된 투자비의 2배가 넘는 통행료가 걷힌 유료 도로에 대해 통행료를 폐지 혹은 축소하겠다는 내용이다. 유료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는 반가운 일이지만, 국민 세금 과도 관련 있는 고속도로의 속사정을 알고 보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국내 고속국도는 총 6,100km로 계획되어 있다. 이 중 과반수는 건설이 끝나 이용 중에 있으며, 약 1,000km는 건설 중인데, 건설 중인 고속도로를 완공하는데는 32조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된다.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액은 2조 2,600억원이었다. 그리고 도로 건설에 3조 1,200억원과 유지관리에 7,600억원이 투입되었다. 작년 한 해 1조 6,200억원이라는 엄청난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한국도로공사의 작년 말 총부채는 약 16조 8,000억원으로 고시되어 있다.

건설 중인 도로를 완공하기 위한 자금 조달도 원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나마 통행료를 폐지하게 되면, 재원 마련은 결과적으로 국민 세금에 의존하겠다는 뜻이 된다. 통행세를 부가하지 않는 독일의 아우토반을 근거 사례로 들 수도 있겠으나, 재정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독일도 아우토반에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원칙을 확정하고, 대형 트럭부터 통행료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오스트리아도 2005년부터 통행료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일부 주정부는 모자라는 도로 투자비를 마련하기 위해 통행량이 많은 무료 도로를 민간 기업에게 일정기간 임대하여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는 대책까지 마련할 정도이다.

국가 전체의 도로 길이가 OECD 국가의 평균값에도 못 미치는 우리나라는 가능한 많은 투자 재원을 발굴해야한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통행료를 폐지 혹은 축소하는 것은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는커녕 현재도 1조 6,000억원이 넘는 재정 적자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다. 뚜렷한 대책 없는 통행료 수입원 감축은 악화일로에 있는 공기업의 재정 부실만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그리고 공기업의 재정 불균형은 불특정 다수인 국민 모두가 부담해야 할 세금 증액으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 일부 이용자의 혜택이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에 제출된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철회되는 게 마땅하다.

이복남(연구위원·bnlee@cerik.re.kr)